

#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천정환\*\*

1. 들어가며
2. 국가 주도의 기억 작업과 민주화
3. 80년대에 대한 기억의 대중서사-정치
4. 기억의 역사학과 도덕감정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요약

이 글은 80년대에 대한 기억정치의 특징들에 대해 논하며, 그 핵심 내용인 민주화운동과 세대 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영화 〈변호인〉과 〈26년〉 같은 대중영화와 유시민·이건범·김명인·김영환 등 몇몇 민주화운동세대의 회고에 대해 논급하여, 국가-대중-주체 등 기억 당사자 사이에서 구조화된 기억정치의 구조를 살폈다. “각성 - 참여 - 투쟁 - 고난 - 극복 - 승리 - 보상 - 공식화 - 화해”를 골조로 하는 공식 기억은 오늘날 ‘정치의 양극화’와 기억투쟁의 이데올로기화·‘진영화’에 맞닥뜨리고 있다. 80년대라는 시간의 구조와 그 인식의 특징은 시대의 주체에게 비가역적인 성장과 몰락, 상승과 전락의 경험으로서 계속 특별한 의미를 갖

---

\* 이 글은 지난 2014년 10월 18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회의에 발표된 글을 지정 토론자인 소영현 교수와 대중서사학회 심사자들의 토의에 입각해 수정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과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

고 유아론적인 인식과 ‘민주화’에 대한 편향된 기억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주제어: 세대론, 기억정치, 집단기억, 민주화운동, 80년대, 386세대, 486세대)

## 1. 들어가며

### 1) 논의의 시각 : 80년대 ‘세대’와 ‘민주화’의 기억정치

이 글은 ‘세대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대론에 내장된 기억의 문화정치의 성격에 대해 말하고 그 교정의 필요와 나아가서는 세대론의 한계를 말하려는 것이다. 근래 1980-90년대에 대한 회고의 서사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지적·심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특히 80년대라는 시대는 직접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거나, 그 경험은 ‘상처’나 ‘영광’ 그 자체이고, 정치의 현장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은 자체가 곧 바로 정치적 자원이 돼 있기도 하다. 이 ‘자원(됨)’에 대한 오용과 혐오가 4/586세대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도 불러일으킨다.<sup>1)</sup> 즉 80년대에 대한 기억의 정치는 두 가지 문제로 연결·확장돼 있어 중요하다. 하나는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 기억정치의 세대 요소는 다시 두 항을 내용으로 한다. 첫째는 ‘80년대 세대’와 ‘90년대 세대’ 사이에서, 둘째는 ‘80년대 세대’와 오늘날의 20-30대(‘88만원 세대’ 등으로 지

1) 이른바 ‘4/586개새끼론’ 같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386세대’로 지칭되어온 70-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를 ‘4/586세대’라 표기함. 이에 비해 ‘70-80세대’는 단순히 70년대와 80년대에 20대였던 세대의 문화적 취향을 표시하는 기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칭되는)와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선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왜 어떤 '세대'가 기억정치의 시간 단위(unit)가 되어온 걸까? '80년대' 또는 '90년대'라는 세대적·시간적 기억의 단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각각의 정치적 무의식은 무엇일까? 결론 하나를 먼저 말하는 셈이겠는데, 한국에서 '80년대' 또는 '90년대' 뿐 아니라 '세대 표상'은 거의 언제나 엘리트주의를 내포해왔다. '80년대' 또는 '90년대'는 물론 학번의 숫자이고 '4/586'은 물론 '민청학련 세대' '긴조 세대', 나아가 '4.19세대' 또한 학생운동과 연관된 기표이다. 그리고 그 운동의 주체들은 거개 서울의 '명문대'를 다닌 남성이다. 그 운동의 주체와 기억의 주체는 일치한다.

이를 생각할 때 <응답하라 1994>가 서울 신촌 주변의 대학가와 '명문대'를 다닌 90년대 학번을 통해 세대 기억을 직조해낸 것은 미묘하고 흥미롭다. 그래서 드라마의 서사는 4/586의 기억서사와 직접 비교할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갖고 있다. 80년대에도 지방 출신 학생들과 하숙집이 있었고 새로운 미디어테크놀로지가 젊은이들을 매혹하였다. 정치적 세대로 호명·형성된 바 없는, 또는 '탈정치' 혹은 '비정치성의 정치성'을 세대정체성으로 포지하는 걸로 인식되거나 주로 그렇게만 표상되어온 90년대 세대조차, 학번의 기표 속에서 엘리트주의적인 세대담론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결국 사실상 한국의 세대=학번 세대이다. <응답하라 1994>조차 세대 기억정치의 생산자는 '서울의 명문대를 다닌 자들임을 재증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번-세대-담론'이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가 세대의 주체에게 부여하는 집합적 정체성과 90년대의 그것은 전혀 등질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80년대) 학번' 혹은 '(386) 세대'라는 호명에 자신을 동일시하

는 강도나 수는 전자가 월등할 것이다.<sup>2)</sup>

한편, 오늘날의 기억정치에서 ‘민주주의’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87년 체제’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관련된다.(후자는 전자에 비해 내포적이다) ‘일베’ 같은 집단은 하나의 좋은 시금석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전망크’ ‘홍어’ ‘민주화’ 따위의 기표로써, 5.18 광주항쟁 같은 80년대의 시대 상징과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전반을 부정하고 조롱한다. ‘일베’가 생산하는 상징·표상·서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전파되고 사용된다. 일베는 80년대나 ‘민주화’에 대한 대중서사의 한 축을 생산하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80년대가 마치 90년대처럼 이전 시대와 다른 문화적 개화와 고도성장,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대한 기억정치의 중핵은 ‘민주화 운동’이다. 개별자들은 대개 다음의 서사구조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억화’ 한다.

- (a) 각성 - 참여 - 투쟁 - 고난 - 극복 - 승리(환멸) - 보상(이탈)-공식(권력)화-화해
- (b) 각성 - 참여 - 투쟁..... 고뇌 ..... 방향 ..... 죽음? (환멸) - (이탈) - 전향·개별화·재출발

(a) ‘각성’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5·18 광주항쟁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승리(환멸)’에는 주로 87년 6월항쟁과 대통령선서 또는 91년 5월투쟁의 경험이 놓인다. ‘전향·개별화·재출발’ 등을 (a) 선 뒤에 놓거나

2) 이런 점을 생각하면 ‘민주화운동 세대’ 내의 시간 격차도 중요할 수 있다. 1980년과 1991년이 운동의 분기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운동 세대’ 안에는 77-79학번들이 포함된다. 즉 운동과 그 주체들은 1980년 전후에 ‘연속’되었다.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학번을 전(前) 4/586, 대략 87-91학번에 속하는 사람들을 ‘후 4/586’이라 볼 수 있다. 후 4/586은 주로 노태우정권 치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운동을 경험했다. 대신 훨씬 적은 숫자가 감옥에 갔다.

섞으면 '후일담'이나 '80년대 인간'의 '90년대화' 서사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집합기억으로서, 국가와 그들의 '세대-경험-공동체'가 그 집합성을 강력하게 보장해준다. 국가의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잠시 이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자.

이 공동체는 정파·조직·동기 등 투쟁과 조직의 경험을 아우른 '친구'다. 민주화운동과 70-80년대는 수많은 '친구' 담론과 표상의 생산 원천이었다. "어두운 죽음의 시대 / 내 친구는 굵은 눈물 붉은 피 흘리며 / 역사가 부른다 / 멀고 험한 길을 / (...) 친구는 멀리 갔어도 없다 해도" 같은 가사를 담고 '친구'를 소재 삼은 무수한 70-80년대의 노래들과 (조금 다른 각도의 '80년대 서사인) 영화 <친구>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sup>3)</sup> 80년대는 20대들의 '벗의 시간'이며 공간이다. '나는 결코 '친구' 노래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인간이 아니었지만 내 친구들은 그랬다'는데 '민주화운동'의 정서와 도덕의 한 핵심이 있다. 사실 그들 하나 하나는 대개 구차한 겹쟁이이며, 설사 이상을 지향했다 해도 모순에 가득 찬 범속하고 미숙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 '혁명가'들은 겨우 스물 몇 살이었다. 하지만, 복수(複數)로서의 그들은 완벽한 인간과 이념에 충실한 '동지'나 '전사'로서 서로들을 상상했다. 그 '친구'는 광주나 혹은 어딘가에서 희생당한 존재이기도 하여, 그들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죄의식)'을 지배적인 공통의 정서로 느꼈다.<sup>4)</sup> 물론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도 '친구'를 소재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상상된' (기억)공동체 내부에 실재했던 세대나 계급의 문제

3) 노래와 80년대 정서에 대해서는 이영미, 『민중가요의 역사와 음악운동』, 『노래 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3; 김정환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3권 등을 참조.

4) 이에 관한 사례는 너무 많다. 브레히트의 시를 제목으로 삼은 박일문의 소설이나 '91년5월투쟁청년모임'의 저서(이후출판사, 2002)를 참조.

에 대해서는, (문학 쪽에서는 공선옥 등의 소설이 이를 다룬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지배적인 서사 내에서는 무시되거나 연구에서도 별로 다루진 바가 없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노동운동 참가자 내부는 서로 다른 계층 및 학벌계급과, 그리고 젠더의 주체들로 이뤄져 있었다. 그들은 ‘연극이 끝난 뒤’ 서로 다른 주체들로 흩어졌다. ‘명문대생’은 ‘명문대생’의 삶으로, ‘삼류대생’은 ‘삼류대생’, 여성은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의 삶으로 말이다. 그럼에도 ‘기억의 공동체’는 대략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sup>5)</sup> 따라서 문제는 기억의 내용 뿐 아니라 기억함의 구조이기도 하다. 누가 그 기억을 생산하고 ‘대리(대표)’ 해왔는가?

이 글은 80년대에 대한 기억정치의 특징들에 대해 논하며, 그 내용인 민주화운동과 주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우선 한국의 기억정치에서 국가에 의해 ‘민주화’가 기입된 과정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2절) 이 국가 주도 기억정치가 80년대와 4/586 세대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의 변화 과정은 그 자체로 극적인 것으로서 오늘날 한국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 〈변호인〉과 〈26년〉 등을 통해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인식되는 방법을 살핀다.(3절) 마지막으로 몇몇 민주화운동세대의 회고에 대해 논급(4절)하여 국가-대중-주체(기억 당사자) 사이에서 구조화된 기억정치의 구조를 살피는 게 글의 목적이다.

5) 유경순,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같은 연구는 ‘학출/노출’의 대립선 정도로 다른 경험기억을 살핀다. 반면 김귀옥·윤충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같은 연구는 모두 뭉뚱그린다.

## 2. 국가 주도의 기억 작업과 민주화

### (1) '민주화 이후' 기억정치의 긴장

식민지배 - 분단 - 내전 - 군사독재를 차례로 겪은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전까지는 사실상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는 사회'였다. 참담한 역사적 오류는 단 한번도 제대로 청산된 적 없고, '매판'과 학살 그리고 국가폭력을 주도하거나 그에 가담해온 지배계급은 계속 친일파/보수/반공/우익으로 재생산돼 왔기 때문이다.<sup>6)</sup> 비유컨대 한국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데에 철저히 지배계급의 이해가 달려있는 '가해자의 땅'<sup>7)</sup>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는 사정을 크게 바꿔놓았다. 광주항쟁과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조사와 청산을 위한 국가적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실제 활동이 수행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연속으로 집권하자 '민주화'에 대한 기념과 보상은 '청산'을 넘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 자신이 유신 이후 군사독재 시기의 가장 큰 '피해자'의 하나로서, 가해-피해의 구도를 바꾸고 '민주화운동'과 그에 수반된 가치를 '지배적인 것'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집단기억은 대개 "구술, 필사기록, 기념사업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공유"된다. 그래서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법은 공식기억을 생산한다. "1969년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인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제정과 그 효과는 국가 주도의 기억정치가 70-80년대식 '저항'의 가치를 '국가화'한 것이다. 그 내용과 실재를 곱씹어볼만하다.

6)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참조.

7) 홍세화 등의 표현. 홍세화, 「가해자들의 땅에서」 『한겨레』 2014.10.9 참조.

이 법은 위 (a)에서 ( ) 속에 든 가치와 (b)는 빼고 '참여 - 투쟁 - 고난 - 극복 - 승려 - 보상 - 공식화 - 화해'를 국가적 서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인동초'라는 별칭을 가진 김대중 자신은 물론, 광주항쟁의 참가자·희생자들과 기타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가 이 공식 서사의 주체로 구성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집단)와 개인의 기억의 협주·협력·조정이 결국 '역사'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집단기억이나 공식기억에 의해 개인의 기억은 실존적인 수준에서도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현대사의 무수한 '가해자'들이 양심 고백을 하거나 참회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이 법 안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대상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무슨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큰 어떤 보상을 받을 건가? 그 공식 기준은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 국가권력에 직접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한 간접피해까지 포함한다.

법 제정이 파생시킨 효과는 다양했고 모순적이었다. 법률 제정 이후 2000~2004년까지 4차에 걸쳐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했으며, 총 접수건수는 11,990건, 이중 보상신청은 1,539건,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은 10,451건이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학적을 회복하거나 '빨갱이' 혹은 '전과자' 따위의 누명을 벗어 '명예'를 회복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수배', '기소유예', '강제징집', '취업거부' 등은 명예회복대상이 아니었으며, 반면 학사징계나 구류는 명예회복의 대상이었다.<sup>8)</sup>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



아 지금껏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9)</sup> 박정희와 전두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이나 용공분자로 몰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말이다. 이는 특히 '민주화운동'과 그 기억·보상의 '자유민주주의' 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애초에 원천적으로, '민주화운동' 개념과 그 기준에 대해 모순과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sup>10)</sup> 이에 관련해 정원옥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그 핵심 내용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가진 의미를 『법의 힘』(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에서의 테리다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서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계산하는 법에서 계산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의란 언제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아포리아의 경험인 것이다.<sup>11)</sup>

얼마나 '열심히' 참가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실제로 죽거나 실종된 노동자·학생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100%, 50%, 30%, 0% 따위의 수치로 평가되었고, 특히 목숨을 잃은 자식을 둔 유가족에게 이 기준은 그 자체로 큰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법의 모순'을 깨달은 민주화운동 참여자들과 피해

8) 김귀옥·윤충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47~148쪽.  
9) 「입수경 방북=민주화운동 선정 재검토한다」 『문화일보』 2013.9.13;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체제변혁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니다"」 『한겨레』 2014.10.12 등을 참조.  
10) 이영재, 「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 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4집 1호, 2005, 164쪽.  
11)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박사논문, 2014)에서 양적으로 평가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유가족 단체를 분열시키고 '애도의 정치'를 망치게 된 기본적 모순으로 지목된다.

를 입은 사람들 상당수가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과거 청산 작업 자체나 그 방식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항의였다. 신청을 거부한 '4/586세대'들은, '기준'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물질적 보상이 운동 참여자들의 희생과 순수성을 금전으로 치환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기에, 그리고 '보상'이란 결국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맞물려야 한다'<sup>12)</sup>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개인들에 대한 '공치사'로 보상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문제제기나 일부 4/586세대의 실존적 판단과 무관하게, 법은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법은 가장 강한 실정성의 운반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정치적 의미도 있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보상은 그 자체로써, 집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파였던 민주진영이 반민주 수구기득권동맹에 대항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화에서 더 나아가서 '과잉정치화' 혹은 '권력의 자원화'에 이르기도 했다고 봐야 한다. 이 '정치화' 혹은 '자원화'는 단지 법적 명예회복 같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일부의 '권력에의 참여'(관료화·정치인화)로써 달성되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여야 정당들은 수차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재야에서 영입·발탁했다. 또는 '민주정부' 자체가 그 참가자들에 의해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인 배출의 중요한 근거지가 됐다. 4/586세대 중에는 누가 정계에 입문했는가? 대부분 '서울의 명문대' 혹은 부산대·전남대 등 일부 지역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들이다. 그들이 광범위한 학생운동 참가자들과 '친구'들을 '대표'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법의 제정과 5.18의 국가기념일화 같은 일 외에도, 이런저

12) 김귀옥·윤충로, 앞의 책, 148쪽 등.

런 책자와 연구를 통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회고가 기억정치의 '총체' 중 일부를 구성해왔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싶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억에 대해 발화한다는 행위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닌다. 개인의 실존적·주관적 차원의 기억도 사회적·집합적 '말하기-듣기'의 과정을 통해 변형된다. 광주항쟁을 위시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70-80년대 세대의 기억은 여러 차례 사회학·인류학자들에 의해 조사됐다.<sup>13)</sup> 외중에 피조사자들은 점점 공식·집단기억의 간섭작용을 받은 스테레오타입화된 기억을 생산하게 됐을 것이다.<sup>14)</sup> 기억이 기억을 재생산한다. 이것이 단지 대중서사 영역에서의 기억서사만을 살필 수 없는 이유이다.

## (2) 기억정치와 그 후과

노무현 정부는 국가주도의 기억정치를 더 진전시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을 2005년 12월 1일자로 시행했다. 그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sup>15)</sup>이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음 사안들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립되었다.

---

13) 그 조사가 주로 '명문대' '운동권' 출신과 여성 노동자중심으로 조사됐다는 것, 또한 노동운동에 참여한 남성 노동자의 기억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지적해볼 수 있다.

14) 그래서 『광주, 여성』 같은 기억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해당법의 '제정이유'

-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sup>16)</sup>

한국 근현대사의 '어두움'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이같은 총체적인 '기억사업'의 효력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면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반작용'만 이야기하려 한다.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조직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사 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공언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예시한다. 결국 2010년 10월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산하 모든 위원회가 "설치목적이 달성"<sup>17)</sup>됐다는 이유로 활동종료 또는 폐지되었다.

위원회들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가해자'와 기득권 세력의 어떤 반발과 비협조가 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억정치가 만든 부수적 효과인지 모른다. 그것은 우익의 반작용과 새로운 정치화·재구조화다. 뉴라이트가 등장하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6) 위 사이트.

17)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http://www.jinsil.go.kr))

같은 책이 조중동의 각광을 받으며 나오고, 기존 관변·반공 시민단체가 '유사 시민화·민간화'를 통해 (재)구성되었다. 재향군인회, 한기총, 어버이연합 등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특권동맹과 극우세력은 과거사 규명과 그 효과를 '안보위기'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이념운동을 벌였다.<sup>18)</sup>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기억투쟁은 오늘날 '정치의 양극화'와 동반되고 있다. 기억투쟁은 점점 이데올로기화·'진영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기억(의 기억)이 시간 속에서 변질·변형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80년대에 대한 1990년대의 기억과 2010년대의 기억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민주정부의 실패, 그리고 보수세력의 연속 집권과 사회의 우경화 과정뿐 아니라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른 민주화운동세대 스스로의 보수화가 기억의 변형이나 훼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19)</sup>

### 3. 80년대에 대한 기억의 대중서사정치

#### (1) 〈변호인〉과 퇴행

80년대에 대한 기억은 물론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모으고, 80년대와 민주화운동, 그

---

18) 여영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안보불감증 심화」 『자유공론』 제40권 9호, 2005. 9 참조.

19) 이런 점에서 소위 후일담 소설의 계보학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리고 노무현에 대한 '기억'과 표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70-80세대'에 속한 많은 관객이 영화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한다. '1000만의 감동' 가운데에는 영화 〈변호인〉을 일종의 '정치신파'처럼 만든 요소에 결부된 것도 많았다. 영화에서 신파적 감상의 대상은 주로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대통령 노무현'이고 또다른 하나는 '80년대'이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그 팬덤정치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생략한다. 이 영화가 '80년대'를 기억하는 방식이 신파적이다. 신파성의 핵심은 뒤 영킨 자기연민과 불건강한 죄의식일 것이다. 신파의 주체들은 문제상황 앞에서 '지금' 합리적 이성의 힘으로 결단하지 않고 과거를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다. 특히 이 영화는 다음 물음 앞에서 '퇴행'을 보여준다. 즉, 4/586들이 '80년대'를 겪으며 소용됐던 진정성과 희생의 가치는 어떻게 주장되어야 하나? 자기와 자신의 세대가 당했던 고난과 희생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이 정당한가? 다음 세대가 처한 전혀 다른 상황과 맥락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나?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회고되는 80년대는 그 자체론 불충분한 것이다. 80년대 세대는 비록 어리고 서툴렀지만,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자'나 '애국자'는 아니었다. 〈변호인〉에서 그려지는 민주화운동은 절대악과 대결하는 연약하고 무결한 존재들의 싸움이다.<sup>20)</sup> 이는 '민주화운동' 전체의 진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민주화' 자체를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에 가둔다. 물론 대중의 기억도 거기

20) 한영인, 『영화 〈변호인〉이 말하지 않은 것들-영화가 외면한 80년대, 누가 그들을 '변호'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4.1.2 도 이런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80년대 운동 중에 사회주의혁명운동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는 것으로 다소 단순화했다. 학생·노동운동의 전위적 대오가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적으로 대자화된 것은 시기상 86년 이후이고, 대중적 수준에서의 '민주화운동'은 급진민주주의, 민족주의, 노동자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위에 펼쳐진 것으로 봐야한다.

머무르게 한다. 6월항쟁에서의 '승리'는 '민주화운동'의 완수나 '80년대'의 최종목적지가 아니었다. '변호인' 자신 6월항쟁 이후에 '제3자 개입금지' 탓에 구속되고 변호사 면허를 정지당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엔 노동운동을 적대했다. 흥미롭게도 『한겨레』의 고참 기자인 김선주는 “70년대를, 유신시대를, 2014년을 고발한 영화라고 보았다”고 썼다.<sup>21)</sup> 중요한 착각(?)이라 보인다. 알다시피 영화는 정확히 80년대 전반의 '민주화운동 시기'인 부림사건(1981년)에서 6월항쟁(1987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이같은 '시대착오'는 자유민주주의자의 무의식이 박근혜정권 하 민주주의의 후퇴와 '종북몰이' 등에 대해 작동한 방어 기제인 듯하다. 어쩌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현재의 문제라 할 때, 영화에 내포된 '자유민주주의'는 무척 나이브하다.

## (2) 기억의 세대 유전 : 〈26년〉

2012년에 개봉된 영화 〈26년〉은 우선 텍스트 자체가 새롭고 독특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시나 소설이 아닌 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원작으로 한 것이며, 둘째 작품의 주인공들이 광주 피해자들의 2세라는 점, 마지막으로 기존의 5.18 문학이나 영화와 달리 1980년 당시의 상황을 거의 다루지 않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복수'(≒책임자 처벌)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첫째와 둘째는 광주의 기억과 그 기억 투쟁이 세대전승되고 주체를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6년〉은 웹툰으로 연재될 당시부터 '광주'를 역사책에서만 배우거나 본 젊은 세대들에게 반향을 얻고 그들을 자극했다. '어른'들은 웹툰을 잘 보지 않기에 웹툰 자체가 세대를 가

21) 김선주, 「영화 '변호인',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겨레』, 2014.1.15.

르는 장르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은, 딱 한 세대의 시간을 건너, 부모 세대로부터 유증된 ‘청산’의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그 과제란 ‘책임자 처벌’이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나선다는 <26년>의 상상력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는 ‘청산’을 위해 개인적 복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막힌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우선, 1988년 이래로 벌어진 광주청문회와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으로부터 1995년의 광주 특별법 제정과 사면의 과정 등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진 것들에 근거한다. 전두환 일당을 용서 없이 처벌하고 국가폭력과 권력찬탈을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교훈으로 만드는 것은 ‘역사적’ 책무였다. 그러나 이 역사적 책무는 ‘정치’에 의해 소모돼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광주시민은 동의해주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의 사람들과 ‘광주’는 상처와 차별 속에 남겨져 있다. 이는 대리된 (거짓) 화해의 허구나, 상처의 덧남(재생산)에 대한 교훈을 일러준다. 또한 ‘진실규명’이 ‘법’과 대립함을 보여준다. ‘역사’가 또는 ‘80년대 세대’가 해야했던 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윤리나 상상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사회에 가장 부족한 정치적 상상력 아닌가? <26년>은 부족하게나마 발동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예민하게 감지한 대중들에 의해 영화 <26년>은 온라인에서 소위 ‘평점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 광주항쟁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네티즌들은 완전히 다른 평점을 주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외중에 일베는 광주항쟁을 폄하하는 지배서사의 새삼스런 진원지가 되었다. 그 사이트는 극우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배설 공간인데 이 글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과 그 정부, 또 광주항쟁을 포함한 ‘민주화’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이 사이트의 ‘대중서사’며 기본 정서라는 점이다. 일베에서 “민주화”는 ‘비공감’의 기



호로 사용되는데, 이 아이러니 앞에서 4/586 세대는 모멸감과 적대감을 느낀다. 그러나 바로 그 세대의 윤리적이고 계몽적인 '민주주의적' 감정 이야말로 일베에서 공유·확산되는 유희와 모멸의 감정과 정반대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표현되고 행동화하는 이런 일은 '민주화 이후'와 민주정부의 실패에 근거한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반된 사용과 그 훼손의 경과를 반영한다.

#### 4. 기억의 역사학과 도덕감정

##### (1) 역사적 유아론

90년대가 오자마자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씌어지고 있는 이른바 '후일담' 소설들, 문학비평과 사회과학에서의 80년대에 대한 논의는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재현과는 별도로 또 거기 영향을 미치며 누적된 시대에 대한 담화와 표상을 제공하고 있다. 근래 4/586세대 지식인에 의해 발간된 이진범의 『내 청춘의 감옥』(2011), 김명인의 『내면 산책자의 시간』(2012)이라든가 류동민의 책 『기억의 몽타주』(2013) 등도 80년대와 민주화운동의 기억의 양식과 윤리를 건드리고 있는 작업들이다. 김명인·류동민의 책은 성찰적인 내면성과 기억의 윤리학을 실험하고 있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근원의 『아빠의 현대사』(2013)라든가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2014) 김영환의 『시대정신을 말하다』(2012) 등의 회고는 다른 결을 갖고 있다.<sup>22)</sup> 이들의 기억작업은 모종의 역사주

22)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책의 저자 중 중앙대 출신 이근원(80학번)을 빼면 모두 77~84학번 서울대 출신이며 남자다.

의를 품고서 왜 80년대가 4/586들에게 ‘특별한’ 시대로서 반추될 것인지를 시사해준다.

‘80년대’라는 시간의 구조와 그 인식의 특징은 시대의 주체에게 비가역적인 성장과 몰락, 상승과 전락의 경험으로서 계속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1991년 5월투쟁,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대문자 역사’를 조형한 사건들이 깊고도 결정적으로 개별자들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다. 80년대에 청년기를 경과한 그들은 ‘이상의 형성과 좌절’이라는 주체의 ‘성장 서사’를 한국사회나 세계사의 변화과정과 동일시하게 되었다.(물론 이의 ‘우파’·‘전향’ 버전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기억’ 속에서 자신들이 ‘세계사적 개인’(헤겔)이라는 착각 혹은 (무)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근원의 『아빠의 현대사』라든가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 같은 ‘현대사’ 서술도 그래서 가능한 것일 테다. 다음은 유시민의 베스트셀러 중 서두 부분이다.

어릴 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에게 이순신, 김유신, 궁예, 항우, 악비, 장자방, 제갈공명, 나폴레옹 등 뛰어난 역사 인물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걸출한 개인을 흠모하는 성향이 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남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도 웬지 편하지 않다. 돈이나 권력보다는 지성과 지식을 가진 이를 우러러보며 내가 남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사회든 국가든 그 누구든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고등학교 시절 출세라는 것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공부보다 정부와 싸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야학에서 같은 연배의 노동자들을 가르쳤으며, 학생회 임원을 맡았다가 감옥 구경을 하기도 했다. 스물여섯 살 이후에는 주로 글 쓰는 일로 밥벌이를 했으며, 30대 중반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더 공부했다. 40대에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잠시 공직사회를 경험했다. “프티부르주

아 계층의 대구·경북 출신 지식 엘리트로서 젊은 나이에 이름을 알리고 출세를 했지만 결국 정치에 실패한 후 문필업으로 돌아온 자유주의자.” 나는 나를 그렇게 규정한다.<sup>23)</sup>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내용을 지닌 첫 단락에 이어진 솔직한(?) 자기규정은 ‘실패’에 대한 고백이나 성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책략 같아 보인다. 그것은 80년대의 대문자역사에 대한 일반적 동일시나 “(a) 각성 - 참여 - 투쟁 - 고난 - 극복 - 승리 - 화해”에서 더 나아간다. 이는 (a)에 대한 완벽한 자기중심적 전유이며, 자기 경험을 시간적으로 앞뒤로 더 확장한 ‘나를 중심으로 역사 보기’이다. 그래서 부제에 “1959-2014, 55년의 기록”이 붙어 있다. 이 시대는 물론 유시민 자신의 생존 기간이다. 이같은 ‘일인칭 역사’는 무명의 민중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보는 미시사나, 최근에 주목받는 일기를 통한 자기증언이나 민중사 읽기<sup>24)</sup>와 물론 다르다. 오히려 그런 역사와 고의로 혼동을 일으키려는 혐의가 있는 ‘승자의 역사’로 보인다. 이 역사적 유아론은 다음과 같은 대목처럼 ‘현재’를 합리화하고 사사(私事)화(이너서클화)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80년 5월 ‘서울역 회군’에 대한 진술이다.

나는 어떻게 되든 이 싸움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역 광장을 지켜도 질 것이요, 학교로 돌아가도 질 것이다. (중략)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 죽는 것은 면했다. 저 신입생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걸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대오 한가운데서 누군가 ‘십 원짜리’, ‘백 원짜리’ 욕을 섞어가며 학생회 지도부를 성토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는 단정해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이름을 물어보았다. 심상정. 아, 저 친구가 여러 학회의 여학생들을 모아 별도의 서클을 만든 다음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23)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 돌베개, 2014, 18쪽.

24) 정병욱 외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등을 참조.

‘무림’의 남자들을 열 받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심상정이구나. “예쁜 입술에서도 험한 소리가 나오네요!” 그렇게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다. 그 뒤 6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sup>25)</sup>

심상정과 유시민의 관계나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학생운동 최악의 실패로 간주되는 ‘서울역 회군’의 실패는 묘하게 영웅담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언제나)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또는 사명감에서 비롯한 것인데<sup>26)</sup> 가장 문제적인 것은 그럼에도 이 책이 ‘객관적’ 사서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 (2) 기억의 도덕감정

이건범의 『내 청춘의 감옥』(상상너머, 2011)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다. 이 회고록(의 일부)도 일종의 혁명가-서사인데, 이는 (a)식 ‘각성 - 참여 - 투쟁 - 고난 - 극복 - 승리 - 보상’ 틀에 (b) ‘(환멸-이탈) 전향·개별화·재출발’을 담은 또다른 전형이다. 책의 부제는 “시대와 사람, 삶에 대한 우리의 기록”인데 ‘전형적인’ ‘386’이 들려주는 80년대 운동과 감옥 경험담에, 90년대의 ‘이탈’이나 ‘전향’ 경험까지도 담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 82학번으로서 감옥에 두 번 갔다오고 운동을 접게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벤처 업계에 진출하였으나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하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됐다.

그럼에도 저자는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 이는 저자 개인의 성품이 작용한 것 외에 세대적인(+계급적인)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 이들

25) 유시민, 앞의 책, 225-226쪽.

26) 물론 이같은 ‘자기중심주의’는 운동과 정치판에 있었던 남성 회고록 서술자가 자주 취하는 태도다. 아예 제목을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중심의 괴로움』으로 삼은 허영철(장기수)나 김지하의 책을 참조.

전(前) 4/586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그들은 서울대 같은 '명문대'를 다니다가 '운동'하여 '승리'했고, 90년대 말에는 벤처기업을 운영했다. 또는 법조인이나 교수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정권을 창출하여 운영했다. 그들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 자랑스레 들려주고 싶어한다. 예컨대 이견범의 책 부제는 "시대와 사람, 삶에 대한 우리의 기록"이고 『아빠의 현대사』의 부제는 "미래를 향한 회상, 광주 세대가 촛불 세대에게"이다. 이는 90년대 학번 운동권들의 '과거'에 대한 태도와 대비된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패배'와 자기 운동경험을 동일시하며, 그 경험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다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하다. 반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4/586세대들의 '집단성'과 자신감이란 어떤 다른 '세대'에도 비길 수 없는 것이다. 이 곧 '4/586 개새끼'됨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견범의 책이 엘리트주의적 자신감과 자만심으로만 차 있다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듯한데, 그럼에도 책의 서두에 줄줄이 붙은 '명문대' 출신 유명인사인 조국(82학번)·공지영(81)·한홍구(79)·정진영(83)들의 추천사는 역시 그들의 '이너서클'과 회고담들의 '그들(만)의 리그' 이야기를 실감하게 한다. 또한 바로 이런 견지에서, 저자 이견범의 감방동지인 1989년 동의대 사건 관련자인 "윤뽀" 씨가 근 7년을 징역 살고 나온 뒤 또 노무현-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두 차례나 더 구속됐다는 결미의 이야기가 가치있게 들린다.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책의 『내 청춘의 감옥』은 한갓 '꼰대담'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80년대는 이런 '비-명문대'나 노동자 출신의 무명 투사들을 무수히 만들었고,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냥 '진짜 노동자'가 된 이들도 허다하며, 계속 노동운동이나 풀뿌리민주주의의 거

름으로 가난하게 분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저 승리자들과 엘리트 ‘민주화운동’ 서사에 맞서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한편, 이진범의 회고의 긍정과 낙관적인 태도가 단지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 면도 있는데, 이진범은 그것이 ‘운동의 힘’이라 믿는다 했다. 책의 서술은 사실 유머감각과 여유가 돋보인다. 책은 이런 면에서 다른 80년대 서사와 조금 달라진다. 기억서사의 ‘정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주체-서술자가 80년대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이룬다. 4/586들은 당시의 경험을 어떤 감정으로 들려주는가? 진지·비장했는가? 자랑스러워했는가? 시대에 대한 기억과 회고는 언제나 특정한 감정을 수반한다. 이는 도덕 감정이 사회운동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비합리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연대와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인지적 프레임이 구성되는 행위 동학의 핵심적 요소인 점”<sup>27)</sup>과 상동성을 지닌다. 80년대에 대한 ‘기억 감정’ 중 상당부분은 죄의식·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부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시민 등 정치인들의 경우처럼 자원화(권력화)에 연결된 과잉-긍정적 자의식과 뻔뻔함에 유관하다. 물론 전자가 더 성찰적이다.

바로 이 문제와 함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을 논한 『상징에서 동원으로』라는 사회학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다소 엉뚱해 보이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2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처음 연구를 기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자처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에겐 그랬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화의 거친 파고를 몸소 체험했던 386

27)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임 과정에서의 도덕 감정의 역할』,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 이학사, 2007, 40쪽.

세대들이었고, 지금은 문화적 외상으로 남아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젊은 날의 미숙함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유되었기 때문이었다.<sup>28)</sup>

운동을 몸소 체험한 저자 자신들이 “문화적 외상으로 남아 있는 상처와 아픔”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 감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주로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의 80년대 학번들이다.

이같은 감정적 태도는 사실 흔하다. 이를테면, 서울대 출신(78학번)의 ‘학출’로 가리봉전자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구로동맹파업(1985)의 주역의 하나였던 서혜경의 회고는 80년대의 운동과 세상, 또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책으로 가득하다.<sup>29)</sup> 또한 앞에서 언급한 김명인의 책에서의 자책과 죄의식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다. 자신이 세상사람을 속여먹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갖 스물세 살이던 1980년에는 민중혁명을 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서른 살이던 1987년에는 다시 민중혁명의 문학을 해야 한다고 마음 여린 문사들을 닦아 세웠다. 본의는 순정했고 논리는 그럴 듯했지만, 그 내용은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었던 허황된 것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낯부끄러운 노릇이지만,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그러한 진짜 같은 ‘사기’를 대망하던 때였다. 나의 한 줌의 이론과 한 줌의 수사학이 우연히 그럴 만한 때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던 그때를 만났던 것이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설익은 이론과 수사학에 걸려들었는지는 모른다. (...) 아마도 그때 내 어설픈 속임수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방법과 행로로 그 일은 물론, 그 일에 의해 흔들렸던 자신들의 삶조차도 잊거나 극복했을 것이다. 속임수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결국 삶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사기를 쳤던 나는 다르다. 나는 나만 속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였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

28) 위의 책, 5쪽.

29) 서혜경,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유경순,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메이데이, 2007.

에 개입해 들어갔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그들 속에 개입해 들어갔던 그 많은 나들을 다 소환해서 추스르지 않으면 내 삶을 추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사기 피해자는 잊으면 되지만, 가해자는 잊지 못한다. 아니 잊을 수가 없다.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당신의 삶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sup>30)</sup>

이런 고백은 심각한 질문들을 부른다. ‘순진하고 무구한’ 세상 사람들(기실 ‘친구들’)이 자기 논리와 수사에 걸려든 “사기 피해자”라 간주하는 것은 또다른 자기중심주의 아닌가? 저렇게 과도한 자책과 심한 무릎 꿇음을 가능케 한 ‘대타자’는 무엇인가? 80년대식 사회주의나 민중문학론을 ‘(진짜 같은) 사기’나 ‘어설픈 몽상’이라 치부할 수 있는 용기는 또 무엇일까? ‘역사 속에서’ 저지른 오류 또는 결과적 오류가 된 어떤 선의의 실천과 언어에 대해 개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김명인의 말이 옳은지 모른다.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친구’나 자기자신에 대해 그랬다. 그래서 기실 회한이나 죄의식은 상당히 널리 공유되기도 하는 정서이다. 그것은 운동의 과정이 제대로 된 ‘성장’에 닿지 못하고 단지 처벌받거나 이탈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운동과정에서 입거나 받은 ‘상처’나 집단적·개인적 ‘이탈’에 결부된 내상이 죄의식이나 회한의 주요 원천이다. 80년대의 주체들은 집단적으로는 제대로 치유받은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신 그것은 개별적인 ‘반사적 행동화’나 ‘성찰적 극복’에 맡겨졌다.<sup>31)</sup>

30) 김명인, 『내면 산책자의 시간』, 돌베개, 2012, 172~174쪽.

31) ‘반사적 행동화’는 “과거를 못 벗어나거나 과거에 사로잡혀 상처 받은 장면을 충동적으로 수행적으로 반복해내는 과정, 또 과거가 끊임없이 되돌아와 미래가 막히고 우울한 쳇바퀴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적 과정”이다. 도미니크 라카프라/김우민 역, 『역사 쓰기, 트라우마 쓰기』, 육영수 외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155쪽.



라카프라가 죄의식과 트라우마에 대해 바람직한 극복방법으로 말한 '성찰적 극복'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분절하고 그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과거와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트라우마의 기억을 객관화해 자신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진일보한 상태"다. 이는 상처를 꺾긴채 묻어두다가 불쑥 광기나 우울로 표출하는 반사적 행동화와 달리 일종의 (재)사회화에 가까운 극복 과정이다. 라카프라는 개인적 노력만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찰적 극복하기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과정"<sup>32)</sup>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많고도 깊은 '애도'가 필요한 한국사회의 여러 사건과 부면에 적용될만한 말인데, 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어떤가? 앞에서 본 국가의 '보상'과 기념화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에도 4/586들의 웅얼거리는 참회나 '영웅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 (3) 전향과 권력

전향담 또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서사와 현재적 이데올로기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전향담은 대개 지배계급 담론이다. 이 건법의 책은 비교적 '가볍게' 전향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경청할만한 면이 있다. 젊은 날의 사회주의 사상의 휴머니즘적 '핵심'을 보존하면서 생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일종의 성숙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성숙'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향은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전향으로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한 태도도 표명한다.

32) 도미니크 라카프라, 위의 책, 228쪽.

자발적 사상 전향이야말로 한 인간의 일생에서 보자면 슬픈 일인 것 같다. 이는 생각의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 어느 일순간 '뺨 돌아서서' 행위다. 점진적 변화는 추억과 흔적이 살아 있어 언제나 생각의 혼란을 일으키는 건강함으로 남는다. 과거와 현재가 꼭 합리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전향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눈높이와 시야의 변화고, 성숙이나 성장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전향은 다르다. 거기엔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직전까지 사상적 적이었던 자들이 박수를 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붙는다. 즉, 과거를 부정하되 그 과거가 상황적 이유로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는 합리화 조치가 따라나선다. 이런 행위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과거의 삶에서 누렸던 행복의 힘을 빼앗고, 오로지 고통의 기억만을 떠올리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불행이다. 그들에게 생의 어느 시기가 비어 버리는 것이다. / 1970~1980년대 재야 운동과 노동 운동에 헌신하다 급변하여 이제는 자신이 청춘을 걸고 싸웠던 과거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운동권에서 겪은 이념적 좌절 때문에 거의 극우로 변신한 뉴라이트 사람들, 북한 주체사상의 주창자였다가 체제를 부정하며 한국으로 망명한 고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그런 연민을 느낀다.<sup>33)</sup>

김영환의 『시대정신을 말하다』는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가 한국사 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부제를 안고 있다. 부제대로 그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서 뉴라이트가 된 주사파, 극우가 된 주사파의 ‘대표’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여전히 ‘민주화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신 그 대상이 북한으로 바뀌었다. 그는 최근 중국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또 했다. 1995년 안기부는 그가 작성한 반성문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대학가에 뿌리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통진당의 의원들이 민혁당 사건 즈음에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고 법정증언했다. 다음은 책의 핵심대목이다. 그는 자기 운동경험의 첫번째 국면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던 1982년에는 광주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

33) 이진범, 앞의 책, 150~151쪽.

고, 전두환이란 말만 나와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던 시절이었다. 이때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자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내가 1학년 말께인 1982년 말, 1983년 초 몇 사람들이 비공식 집제한 것에 따르면 서울대 1학년 중에 이념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2천 명 정도 된다고 했다.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다. 운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운동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sup>34)</sup>

그리고 주사파의 긍정성, 동시에 그 반대 방향의 반성과 전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기긍정한다. 아래 인용문의 “그런데” 전후로 연결된 이 긍정은 참으로 쉬워 단순하고도 놀라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때의 운동은 우리 세대 전체의 운동이었다. 직접 앞에서 뛰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동조한다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이론적 정립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주사파가 나오기 전의 학생 운동은 날로 과격해지기만 했는데, 주사파가 등장한 이후 ‘직선제 개헌’이나 ‘민주정부 수립’ 등의 대중적 구호를 내걸게 되었고 투쟁방법에서도 과격한 방법을 피했다. 이러한 방식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 주사파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비록 그 이후의 운동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과 자체까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사파는 그 속성상 친북적 성향을 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측면은 명백히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나는 북한과 직접 연계까지 갖지 않았다. 나의 반성문은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에서의 반성문이라는 글의 형식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거기에는 내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sup>35)</sup>

이같은 ‘전향에 대한 합리화와, 자신이 일관성·진정성 있는 운동가

34) 김영환, 『시대정신을 말하다』, 시대정신, 2012, 134-135쪽.

35) 위의 책, 135쪽.

였으며 지금도 ‘소명익’에 불타는 존재자라는 의식은 전향한 뉴라이트-극우에 두드러지는 듯하다. 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이라든가 국회의원 하태경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경우다.<sup>36)</sup> 그들은 전향을 180도 반대 방향의 ‘정치’의 에너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통의 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그 전향이 권력 획득을 위한 가장 유력한 자원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야당 정치인이 된 4/586과 직접 비교할 만한 대목이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국가·대중·지식인 남성들의 주체가 80년대에 대한 세대 기억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기억들 사이의 충돌이나 편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양가적인 논의를 품고 있었다. 첫째 세대론의 여전한 자장 안에서 필요한 담론적 과제를 말한 것이다. 이는 80년대 안과 바깥의 기억으로 나뉜다. 즉, 국가의 공식기억과 엘리트들에 의해 윤색된 ‘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80년대에 대한 기억의 ‘현재성’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주체의 위기’를 맥락으로 한다. 이명박-박근혜 8년, 신자유주의 16년, 민주정부의 실패 속에서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의 위기, 우익 보수의 장기집권 가능성과 그 효과에 따른 주체의 해체 또는 주체형성의 불가능성은 심각하게 내재화되고 있다. 그래서 폭력적 국가에 대한 전면적·급진적 저항의 시공간을 돌아봐야 하는 급한 이유가 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핵

36) 이영훈·안병직,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기파랑, 2007 등 참조

심은 '민주화'만이 아니었다. 설사 '민주화'라 해도 그 핵심이 '직선제 쟁취, 민주정부 수립'이 아니라 그 핵심은 노동해방과 평등사회의 건설이었다. 달리 말하면 '전태일 되기' 혹은 '전태일의 친구 되기'였다. '민주화' 중심의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담론은 '노동'과 결부된 이 부분을 빼놓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운동'이 부활시켜야 할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근원성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면, '민주화'에 대한 기억은 퇴행일 뿐이다.

둘째,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투쟁과 관련해서 90년대를 재규정해야 한다. 90년대에 대한 회고와 기억작업은 80년대에 대한 그것에 비하면 아직 폭이 좁고 덜 '정치화'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0년대'라는 기표 자체가 내포한 정치성의 농도나 정치적 세대경험이 실제와는 달리 좁게 인식·설정돼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정치(자유민주화와 개인화)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 신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점점 새롭고 중요한 내용을 획득해가고 있다. <응답하라 1994, 1997> 등이 보여준 기억의 정치학은 이 '세대'의 정치화의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친다. 다만 '문화적'이거나 부분적일 뿐이다. '90년대 세대'와 운동 참여자들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재구조화하고 발언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민주화 이후'의 4/586의 오류나 '개새끼'똥을 비판하여 교정하거나, '87년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문화적 방도일 것이다.

그리고 세대론 자체의 의미와 한계를 재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대론은 불충분한 연대의 논리로 사용된 적도 있다. 언제나 젊은이들이 변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차이와 무관하게 '세대'로 행동하고 호명된다. 그러나 어쨌건 세대론은 불필요하며 계급과 젠더의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더 근본적으로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민주주의'

투쟁을 준거로, 현재까지 인식돼온 상투적인 80 대 90 세대의 구분선과 '민주화(운동)'의 신화를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91년5월투쟁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 하는 소리가...』, 이후출판사, 200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2012.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 김명인, 『내면 산책자의 시간』, 돌베개, 2012.
-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1999.
- 김정환,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3권
- 도미니크 라카프라/김우민 역, 『역사 쓰기, 트라우마 쓰기』, 육영수 외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 과정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 이학사, 2007.
- 여영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안보불감증 심화』 『자유공론』 제40권 9호, 2005. 9
- 유경순,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메이데이, 2007.
-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 돌베개, 2014.
- 이근원, 『아빠의 현대사』, 레디앙, 2013.
- 이건범, 『내 청춘의 감옥』, 상상너머, 2011.
- 이영미, 『민중가요의 역사와 음악운동』, 『노래 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3.
- 이영재, 『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 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4집 1호, 2005.
- 이영훈·안병직,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기파랑, 2007.
-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박사논문, 2014.
- 제프리 K. 올릭, 최호근 외 역, 『국가와 기억-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한영인, 『영화 〈변호인〉이 말하지 않은 것들-영화가 외면한 80년대, 누가 그들을 '변호'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4.1.2.

## Abstract

### The Memory Politics and Generation Debate on the 1980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Cheon, Jung-Hwan (SKKU)

This paper argued characteristics of the memory politics on the 1980s, focusing on the problem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generation subjectivity. I explored the structure of memory politics which cast between state, people and elite-memory-subject by examining the movie <변호인> and <26년> such popular films and the memoirs written by Ryu Si-min and Kim Young-Hwan, Kim Myeong-in and etc.. The official mem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frame "Awakening - join - struggle - hardships - overcome - win - compensation - formulation - reconciliation". Today, it is confronting against "polarization of politics and ideology". The recognition of the 80s' of the 386(486) generation make aware of themselves as World-historical individuals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the rise and downfall. But it continues distorting by their self-centrism.

(Key Words: generation debate, 386(or 486) generation, memory politics, the 1980s, Democratization movement)

Ⅰ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